전주시, 장애유형별 복지정책 밑그림 마련

재가장애인복지 기본계획… 어울림센터 건립 · 이동권 확충 등 복지 10대 중점사업 제시

전주시가 어울림센터 건립·운영과 장애인 이동권 확충 등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미옥 교수)과의 용역을 토대로 마련된 '전주시 재가장애인복지 기본계획(안)'에는 각 장애유형별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10대 중점사업이 제시됐다.

이날 발표된 전주시 장애인 복지 10대 중점사업은 △어울림센터 건립 및 운영 △장애인 이동권 확충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운영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및 효과적 운영 △중·고령기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건강관리 바우처 시행 △장애감수성이 높은 복지플래너 배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유치 △탈시설 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장애인주저지원사업 확대 등이다.

시는 제한된 복지예산과 자원을 고려해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고 장애인들의 요구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장애인관련 학계·기관·단체 전문가 및 실무자, 장애당사자, 장애인 가족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가 장애인 욕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장애유형별 장애인들의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장애인복지의 기본 원칙과 비전 및 목표, 특화된 지원체계 구성 필요성, 세부 추진목표 및 사업(안) 등 전주시 재가장애인복지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6일 휠체어를 타고 한옥마을 일대를 돌며 장애인들의 고충을 체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2일까지 각 장애유형별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을 방문해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실무자의 의견을 경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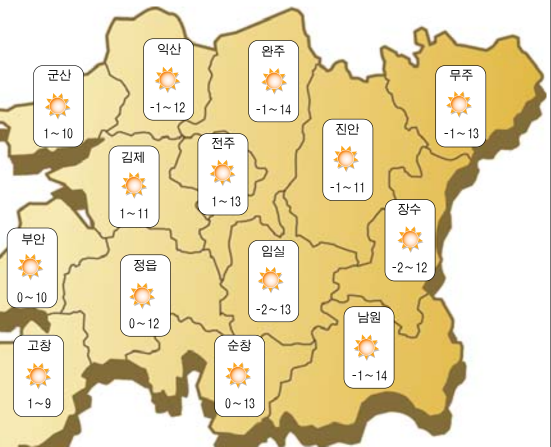
김 시장은 이어 탈시설 공동생활가정과 전북 여성장애인연대, 장애인부모회, 각 유형별 장애인단체를 돌며 장애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전주시민 단 한사람도 그 어떠한 이유에서건 복지정책에서 소외돼서는 안된다"라며 "전주시는 장애로 인한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시 등록장애인은 총 3만2978명으로, 이 가운데 53.4%인 1만7625명이 지체장애인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재 기자

3월 24일 목요일 해뜸 06:29 | 해짐 18:46 달뜸 19:30 | 달짐 06:51

날 씨 최저기온 -2~1도 최고기온 9~14도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본격화

2021년까지 역사공원 조성
동학농민혁명 콘텐츠 강화

23일 간부 현장체험 아카데미에 나선 전주시 국·소·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동학농민혁명 문화벨트 조성 예정지를 방문 사업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업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시가 대한민국 근대민주주의의 성지인 전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하는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전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주화약으로 집강소를 설치해 민관 협치가 실현된 전주의 근대역사를 재조명하고, 관련 유적지와 전적지를 연계한 문화콘텐츠 강화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동학농민혁명은 반외세·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세운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으로, 전주는 동학농민혁명 최대 전승지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전주성 함락과 전주화약을 통해 집강소가 설치되고 폐정개혁이 단행되는 등 대한민국 근대 민주주의의 서막을 연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이 전주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이에 시는 전주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위상에 걸맞는 기념시설 조성 및 역사문화 자원화를 통해 근대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사람이 최우선 가치인 '민(民)의 도시'라는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추진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1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총 42억원을 들여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군과 농민군의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완산도서관과 곤지산 등 완산공원 일대에 생태탐방로와 꽃동산을 조성하고, 폐배수지를 재생해 기념전시공간(역사관) 등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 전북도 투자심사와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1단계 사업에 본격 착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6억원을 투입해 완산도서관 일부 기능 개선 및 리모델링을 바탕으로 (가칭) 동학농민혁명정신계승관과 민(民)의 광장 등 거점시설을 만들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복원공사 중인 전라감영과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하기 전에 숙영했던 용머리고개, 김개남 장군의 순교지인 초록바위 등 주요전적지를 연계한 동학관련 콘텐츠를 구축해 하나의 역사문화벨트로 묶을 계획이다.

시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가 구축되면 기존 경기전과 풍패지관 등 조선왕조의 본향으로서의 '왕(王)의 도시' 전주의 이미지와 함께, 민관 협치가 실현됐던 사람 중심의 '민(民)의 도시'가 결합된 새로운 도시의 정체성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간부공무원들은 이날 '간부 현장체험 아카데미'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문화벨트 조성예정지를 방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부서간 협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도, 9개 우수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선정

전북도는 22일 '2016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9개소의 우수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2월 19일까지 공모한 16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공동체성 확보 여부 등을 중점 평가 심사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자립경영이 가능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북도가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마을기업에는 최고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신제품 개발,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기계·장비 구축, 판로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을 통해 사업성, 공동체성을 강화, 마을기업 간 또는 시군단위의 연계·공동사업 유도로 마을기업의 성공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계획 발표

창업기업 ·경제단체 부문 신설

전북도는 23일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선정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우수중소기업인상부터는 2~7년차 전도 유망한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기업' 부문과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도내 경제단체 대표에게 시상하는 '경제단체' 부문이 신설된다.

선정대상 기업은 도내 제조업체 중소기업 중에서 최근 2년간(2014년~2015년) 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공헌, 우수신제품개발, 장수기업, 창업기업 부문 등 6개 부문에 많은 성과를 달성한 기업 CEO와 중소기업지원 공헌도가 높은 경제단체 부문의 단체대표를 선정한다.

이후 도는 오는 5월 중(중소기업 주간 행사 시)에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을 희망하는 기업 CEO는 오는 4월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도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면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우수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된 기업과 단체에게는 부문당 3,400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보조금과 전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해 인증서를 수상한 날로부터 5년 동안 ▲홍보 ▲주요행사 초청 및 우선 예우 ▲기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영수 기자